

“ 일선 과학기술현장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할 것 ”

글 | 이덕환 _ 본지 편집위원장 duckhwan@sogang.ac.kr



김 중 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Q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에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과 ‘과학기술’이고,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요소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임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등 과학기술계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기술강국 건설과 대학경쟁력 제고를 통한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공직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과학기술계의 발전에 기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화학공학과에 재직하면서 산학협력단장, 나노과학연구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과학기

술인력 양성, 연구개발사업의 제도 효율화, 연구성과의 활용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브랜드인 '과학기술기본계획, 577전략' 수립에도 참여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회기반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 R&D 재원배분에 대한 정책 수립에도 참여했습니다. 그 동안 대학행정과 각종 국가 위원회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계를 화합시키고 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그 동안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하시면서 정부 당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단기적 응용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여 창조적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출범을 통해 기초원천기술 투자 확대, 인재개발과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 확립, 대학과 출연(연)의 연계강화, 과학기술인재의 체계적 양성 등 과학기술계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과 과학기술의 시너지 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 관련부처, 국회 등 여러 정책요소들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새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작년에는 국가발전의 성장축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부처통합에 따른 융합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또한 새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577전략, 기초·융합연구, 인력양성 등 2012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재편되는 세계질서에서 주도적 위치를 선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기술 융합형 녹색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창의적 기초·원천연구를 강화하여 미래유망 원천기술을 미리 획득해야 할 것입니다.

Q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모방형 연구에서 창조형 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 방향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시고.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은 양적인 측면에서 급속하게 성장하여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총 R&D투자비중은 3.47%로 이스라엘, 스웨덴에 이어 세계 3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선진국 모방형 연구개발, 응용개발 중심의 연구개발에 치우쳐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자체적인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형 R&D로 전환시키는 일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창의적 연구성과를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기초연구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고위험·고수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제조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녹색성장, 지식서비스 등 미래성장동력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과가 미흡한 분야, 부처 간의 과잉·중복 분야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R&D제도, 성과확산 시스템, 연구주체의 연구역량 등 R&D 전반의 관리시스템도 선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Q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을 통합하는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한국연구재단법안'을 지난해 10월 15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사정 등으로 아직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곧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구사업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미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 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공고하였고, 2월 말까지 과제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한국연구재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3월에 설립위원회를 출범시켜 임원선임, 정관작성 및 법인 설립등기업무를 추진하고, 5월까지 시행령 및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6월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출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연구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PM제도를 강화하고, 우수한 연구자가 PM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PM 제도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M 윤리규정을 제정·운영하여 PM의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게 할 계획입니다.

Q 지난 1월 13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아직도 벨트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외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외국의 선진적인 연구개발과 관리 경험이 있는 분을 영입해 출연(연)을 업그레이드 시킬 생각입니다. 우선 KIST를 변화시키기 위해 'KIST원장 서치 کمی티'를 구성해서 해외 석학의 영입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연구소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해외 우수 연구인력 유치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09년에는 시범사업으로 130여억 원을 투자하고, 외국인 연구자의 생활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기초과학역량을 획기적으로 진흥시켜 부를 창출하겠다는 새 정부의 핵심전략사업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관련 연구원을 설립하여 국내외의 우수한 고급두뇌를 유치하고, 대형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며, 지속성장 도시조성을 위한 비즈니스 기반 구축과 과학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국제적 도시환경 등을 조성해 나간다는 개념입니다. 앞으로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연구원 설립 및 우수한 연구원 유치, 중이온가속기 구축, 비즈니스기반구축 등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Q 출연연의 관리도 맡고 계십니다. 출연연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나 시장실패 위험성으로 민간영역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기술 분야의 연구, 국가적 현안과 국제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중심형 연구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출연(연)이 이러한 분야의 연구에 주력토록 하고,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원들의 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연구환경의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PBS를 개선해서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고유기능을 정립하고, 연구원 개인의 창의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Q 우주 사업을 비롯한 거대과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06년에 발사한 다목적실용위성 2호로 촬영한 1m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지도제작 등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고, 또 위성영상을 해외에 수출해서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을 배출함으로써 국민에게 우주개발에 대한 꿈과 희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KSLV-I)를 통한 위성자력발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나로우주센터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안전점검과 성능시험을 통해 성공적인 발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청정에너지 확보를 위한 핵융합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게을리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올해부터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기후변화대응기술과 녹색성장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거대과학은 대규모 예산과 연구인력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우주분야에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우주발사체, 위성개발에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Q 5년 간 8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을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200여 명의 해외 석학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있으시겠지요?

WCU사업으로 국내 대학에 유치되는 283명의 해외학자들은 교육활동과 공동연구 등을 위주로 활동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대학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대학 자체의 활용계획과 더불어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대학내 외의 교육활동 강화를 위해 해외학자들을 활용한 대학내 콜로키움 개최, 우수 강의를 외부에도 공개하는 오픈코스웨어 체제 구축, 대학 간 학점인정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학자와의 공동연구 활성화와 연구성과 공유를 위해 노벨-코리아 포럼의 정례적 개최, 해외 학자를 활용한 다양한 학술대회 지원, 사업성과 보고대회 개최, 각종 자문활동 참여 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Q 대학의 인문사회, 문화예술 분야 학술연구 지원 업무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교과부가 너무 '융합' 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과학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및 예술분야의 학술연구가 균형 있게 꽃을 피워야 합니다. 특히,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이자 공동체 문제를 고민하는 학문으로서 의미가 큼니다. 이에 교과부는 '인문사회 학술연구조성사업'으로 인문사회와 예술체육분야의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문분야, 특히 인문학의 경우 그간 사회적 수요의 감소, 대학의 폐과 등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인문학진흥계획'을 마련하여 인문학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문학분야의 세계적인 연구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문한국 사업을 통해 인문학, 해외지역학분야의 대학 연구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인문학의 학문 특성을 고려하여 저술집필을 지원하는 인문저술 사업도 호응이 좋습니다. 또한 인문학이 학문 공동체를 넘어 대중과 호흡할 수 있도록 인문학의 대중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 인문학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외계층이나 이공계생을 위한 인문 강좌를 지원하고, 매

년 10월에는 인문주간 행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강연, 체험활동 등 인문학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인문학자의 열정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앞으로 인문학이 강의실을 넘어 대중과 호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더해 교과부는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만남을 통해 학문의 벽을 낮추는 학제 간 융합연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처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는 인문사회학자가 담당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과학문의 벽을 허무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과학기술계 '홀대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과학기술계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이후 교육현안에 밀려 과학기술이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과학기술계와의 소통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에는 과학기술특보를 신설하여 과학기술계 현안 및 의견수렴에 힘쓰고 있으며, 대통령께서는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고, 특히 지난 1월 8일 과학기술신년회에 참석해서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 하셨으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구성, 과학기술 투자 확대, 연구자 친화적 연구여건 조성 등 다양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홀대론'이 수그러지지 않는 이유는 과거 '과학기술부총리' 시스템이 '교육과 과학기술 통합 부처'로 변경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학기술 우대론'이 나오도록 일선 과학기술현장과 정부 사이의 관계를 좀 더 견고히 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핵심 원동력은 과학기술입니다. 정부는 언제나 과학기술계의 입장에서 과학기술발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를 믿고 언제든지 건설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를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과학기술자는 국가 경쟁력 향상의 최선봉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